

윤건영 등 文 복심 잇단출마... ‘靑 총선’ 논란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 MB 檢,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윤 전 실장, 서울 구로구를 출마 유력 일각서 靑인사 70여명 출마 전망
대변인 “프레임 만들기 위한 것 출마자, 지난여름 이미 정리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6일 청와대 개편 관련 발표를 위해 춘추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초반 레이스를 규정하는 화두로 ‘청와대 총선’이라는 말이 정계에서 증폭되는 모양새다. 당초 여권에서는 집권 중 치러지는 선거에서 ‘청와대 출신’의 출마 리스가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다가올 총선에서는 ‘청와대 총선’이 다른 변수를 초반부터 압도하며 주요 선거 이슈로 부상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청와대 개편이 이러한 선거 이슈를 만드는 데 한 몫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조직 및 기능을 일부 재편하고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인사에서 눈에 띈 인물은 단연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정평이 난 윤건영 전 청와대 국

정기획상황실장이다. 윤 전 실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났다. 그는 서울 구로구를 지역구에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당선된 직후 초대 실장으로 발탁됐다. 그는 청와대에서 상당한 활약상을

보였다. 특히 현 정부에서 진행된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 작년 10월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를 추모하기 위해 보낸 조의문을 판문점에서 직접 받은 이도 윤 전 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전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 약 70명’이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출마는 바보들의 행진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70명이 넘는 청와대 인사들이 4월 총선에 뛰어들었다고 한다”며 “청와대 인사들이 출마 목적으로 잇따라 사퇴하면서 청와대가 인사 소용돌이에 빠졌다”고 이렇게 비판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여권 안팎에서도

고개를 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70명 정도의 청와대 인사들이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는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수치상 70명이라는 인원은 절대 적은 인원이 아니다. 이 경우, 당연히 당청간 지역구 교통정리가 수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실장의 거취가 대표적이지 않나”라며 “윤 전 실장을 둘러싼 총선 출마 지역구로는 서울 구로구를 비롯해 경기 부천, 경남 양산 등이 거론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러한 뒷말을 인지하고 수습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 중인 청와대 총선 관련 프레임은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가진 분들은 지난 여름에 다들 입장을 밝혀서 정리 가 다 된 바다”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수백억원대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먼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구형을 둘로 나눠 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석대성기자

野 “靑 文 총선활동 우려” 丁 “탈당 안해”

與野, 오늘부터 민생·경제법안 처리 나서

정세균 인사청문회 2라운드

포스코 사옥 매각개입 의혹 등 쟁점 야권, 결정적 하자·위법성 못찾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차전에 돌입한 여야는 후보자 정책능력과 비위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일에 이어 8일 오전부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떠오른 쟁점은 ▲정 후보자의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 ▲화성시 택지개발 사업에서의 측근 특혜를 위한 외압 행사 의혹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소득 대비 과다 지출 및 탈세 의혹 ▲지인·지지단체 특혜 의혹 ▲삼권분립 훼손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중립성 침해 우려 등이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4년 송도사옥 지분을 보유한 사업가이자 정 후보자 지역구민 박모씨가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정치인에게 청탁했고, 정 후보자는 포스코를 압박했던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사람이 ‘4300억원에 내 땅을 팔 수 있는데 3000억원에 팔려서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정 후보자가) 잘 따져보라고 얘기한 것을 청탁이라고 한 것”이라며 “잘못된 것은 잘 따져봐 달라고 말하는 게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한국당 간사 김삼훈 의원이 전날에 이어 정 후보자 측근이 경기도 화성도시공사로부터 특혜성 택지공급을 받았고, 정 후보자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기

가 막힌다”며 “김 의원에겐 유감을 표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전날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 “아무리 후보자라고 하지만 24년간 정치하며 이런 모욕적 말씀은 처음 듣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경우 “일각에선 후보자가 친문(문재인 계파) 세력의 오랜 동맹군으로 친문의 총선 승리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민주당 탈당 의사를 물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탈당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했고, 국회의원 간 후원이 품앗이 성격을 띠고 있던 지적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허용 한도 내에서 한 톨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에는 증인을 불러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능력 검증에 나섰다. 야당 입장에서 결정적인 하자나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

한편 국무총리 임명 최종 단계인 국회 본회의 동의안 표결은 다음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직 이낙연 총리가 4월 15일 총선에 출마하려면 오는 16일 전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패스트트랙 쟁점 파행 변수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잠시 숨을 고른 정치권이 9일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 개최에 청신호가 들어왔지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파행 변수로 남아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민생법안에 걸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결단으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국민에게 박수를 받았다”며 “민생법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신속하게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17개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 2건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 트랙 지정안에 대해서는 철회 여부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 한국당은 이번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 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비쟁점 법안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 김재원 정책위의장(왼쪽),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서 재계와 금융계 숙원인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데이터 3법은 전 세계가 경쟁 중인 4차산업 개발·발전에 뛰어들기 위한 필수 법안으로 꼽힌다. /석대성 기자

국방부장관, 24개 방산업체 CEO와 교류

“올 방위산업에 예산 7278억 편성”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방산업체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과 박재민 차관,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해 24개 방산업체가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장관

이 방산업체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2018년 12월 최초로 개최한 이래 이번이 세 번째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ADEX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방산업체의 높은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며 “방위산업이 반도체, 조선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뜻깊은 한 해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국내 방위산업의 잠재

력을 제고하기 위해 7278억원의 ‘핵심 기술개발 및 연구 인프라 보강예산’을 편성하고, ‘방위산업 육성예산’을 작년 대비 69.3% 증액해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형’이라 불리는 국산화에 역점을 뒀지만, 무리한 국산화는 군수품의 신뢰성과 성능의 저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위사업 추진여건 및 애로사항과 관련된 토론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24개 업체에서 20여건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문형철 기자

병역명문가 신청때 독립유공자 가문 포함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접수를 받는 올해 병역명문가 신청에 독립유공자가 문도 포함된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삼촌, 본인과 형제, 사촌 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이다.

병무청은 8일 “올해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전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군 활동 등 독립유공자 가문을 새롭게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같이 밝

혔다. 올해가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과 한국전쟁(6.25) 발발 70년을 맞아 항 것과 관련해 병무청은 한국광복군 및 참전유공자 등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재한다. /문형철 기자 captinm@